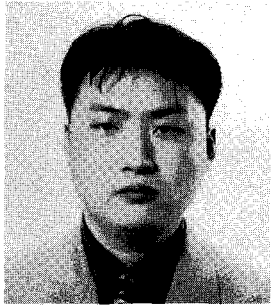


# 소값 안정은 구조적 유통개선에 있다



김 성 훈

농수축산신문 기자

국내 쇠고기 수급의 조점은 생산자들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치우쳐 있다. 생산자들이 생산한 한우고기를 원활하게 소비시킬 수 있는 유통채널 확대, 적정 수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너무도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까지나 소값 폭락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을 리 없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소값파동은 많은 농민들에게 있어 소사육 포기를 의미하는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소값폭락은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더구나 국내 쇠고기 수급은 생산자인 농민이 어떻게 얼마만큼 생산하는데 달려 있다기 보다는 도시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다.

모든 농축산물이 그러하듯 아무리 품질이 뛰어난 축산물을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내다 팔지 못해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수급은 생산과 소비를 축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생산이 여의치 않고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균형이 깨져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쇠고기의 수급불안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이며 피해의 몫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소값이 계속해서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농가들 사이에서는 만연하고 있다. 소값이 급락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소 출하를 더욱 부추겨 값을 필요이상으로 낮추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소값하락 현상의 원인을 놓고 여러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소값을 낮추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 방출량의 급증으로 볼 수 있다. 수입쇠고기 판매량은 올 3월까지만 4만4천2백톤, 전년대비 37%가 늘어났다.

가격도 한우고기보다 3배나 낮은 kg당 2천7백62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올들어 수입쇠고기가 국내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5월 중순 현재 5만5천6백51톤을 수입, 올해 쇠고기 시장접근분량 8만8천2백톤중 이미 64%를 수입한 셈이다.

소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 쇠고기 1만5천톤가량이 창고에 고스란히 소진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수급조절용이외에 SBS 쇠고기 재고물량까지 합치면 2만톤이 소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내산 쇠고기의 서울지역 1일 평균 출하량은 1~4월간 전년대비 6.5% 줄어든 2천1백59마리 분인데 반해 올해 5월상순까지만 출하된 양은 5백45마리분으로 지난해 5월 한달간 출하량보다 15%가 많다.

수입쇠고기의 비정상적인 방출 확대와 재고 누적, 갑작스럽게 몰린 국내산 쇠고기 출하는 국내 소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고 있다.

문제는 쇠고기 수요가 늘어도 정부는 수입쇠고기를 많이 풀어 실제 소값은 크게 오르지 않아 소비자들에게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반면 쇠고기 수요가 감소할 경우 소값 폭락과 생산자들의 손실은 보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데 있다.

즉 수급불안의 피해는 농민의 몫이고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덜 먹으면 국내 소사육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쇠고기 수급의 비중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쇠고기 유통체계 개선 및 상품개발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류 등급제에 대한 홍보조차 소비자에게 제대로 못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쇠고기 유통의 현주소이다.

한우고기 유통의 대표적인 한우전문점은 매장 입지와 부위별 소비 편중 심화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 산지소값이 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의 실제 쇠고기 구매가격은 예전과 큰 변화가 없다.

소비자들의 쇠고기 구입 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쇠고기 방출 등 갖은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으나 소값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격 안정

대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은 요원한 실정이다.

농림수산부는 국제경쟁력을 앞세우며 앞으로 소값은 수소 4백kg 기준 1백28만원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은 호당 소사육마리수가 1백마리일 때 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축협중앙회 축산관측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사육호수는 51만8천호, 총 사육마리수는 2백63만5천마리로 호당 사육마리수는 5마리에 불과, 목표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값을 낮추기 위한 무리한 수입쇠고기 방출은 국제경쟁력 강화는 커녕 소값 파동을 불러 일으켜 국내 한우농가들을 농촌밖으로 내몰 수 밖에 없다. 쇠고기 소비가 줄어들면 별다른 수급안정 장치도 전무하다.

한우농가들의 생산비를 늘려 적정 이윤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배합사료값 인상이다. 지속적인 배합사료값 인상은 소 사육의욕을 저하시켜 출하를 서두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국산 옥수수 신곡값이 CBOT(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C&F 가격기준 톤당 1백60~7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고 일부 빠른 국내 사료업체들은 이미 선도거래를 통해 선점해 놓은 상태이다. 구곡거래가격이 2백30달러선임을 감안할 때 여름철 이상기후 변화가 닥치지 않는 한 곡물값은 과거 예년에 비해 크게 오른 수준이기는 하나 큰폭 떨어지는 셈이다.

곡물값이 2백달러 이상으로 치솟자 올 4월 사료업체들은 배합사료값 11.5% 인상을 단행했다. 그렇다면 올 연말 배합사료값은 다시 낮춰야 함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대다수 농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

쇠고기 수급안정은 생산기반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결조건이다. 수급은 생산과 소비 양쪽 모든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이견을 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쇠고기 수급의 초점은 생산자들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치우쳐 있다. 생산자들이 생산한 한우고기를 원활하게 소비시킬 수 있는 유통채널 확대, 적정 수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너무도 필요한 시점이다. 언제까지나 소값 폭락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을 리 없다는 평범한 진리이다.